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탐색 연구: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사례를 중심으로

김 상 봉* 나 경 태**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본 연구는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청년 정책 거버넌스 국내의 현황 분석 및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문제점 및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활성화 방안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활성화 방안 탐색을 위해 청년 정책 거버넌스의 대표격 사례로 볼 수 있는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FGI 및 서면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로 첫째,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운영의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질적이고 눈높이에 맞는 교육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셋째, 청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의 필요성이 있었다. 넷째,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성이었다. 이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정책 거버넌스의 구성원인 지자체와 청년 간의 협치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 또는 단체의 참여이다. 둘째,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하여 참가자에 대한 금전적, 비금전적 형태의 적절한 보상책의 필요성이었다. 셋째, 청년 정책 거버넌스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적인 관심 및 참여 지속성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내외부적인 교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였다. 넷째, 청년 정책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효과성, 활성화 방안 등을 탐색할 수 있는 연구 지원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며, 향후 청년 정책 거버넌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과 관련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해준다.

주요어: 청년정책거버넌스, 청년거버넌스, 청년정책, 청년정책네트워크

이 논문은 2022년 서울연구원 작은 지원 연구사업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 주저자: 김상봉/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박사과정/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산로 154-42
/E-mail: meeting_kim@naver.com

** 공동저자: 나경태/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박사과정/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산로 154-42
/ktyn012@naver.co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0년 이후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세대를 선택하라고 하면 MZ세대라고 불리고 있는 2030세대, 청년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청년 세대를 칭하는 MZ세대라는 용어는 1980년대 초반부터 2020년대 초반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 Generation)와 1995년 이후에 출생한 Z세대(Z Generation)를 합하여 부르는 말(이규홍, 정성은, 2022)로, 성장기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을 경험하였으며 이전 세대보다 나은 경제적 여건에서 교육 및 활동 부분에서 많은 것을 경험한 세대이다. 특히 현 세대의 청년은 일정 연령대면 진학, 취업, 결혼, 출산이 당연시 여겨졌던 기성 세대와 달리 더욱 개인화되고 선택지가 넓어진 시대에 살고 있음에 따라 기성 세대와는 다른 형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청년 세대는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현 청년의 문제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순 인구감소 상태로 접어들었다. 통계청의 “2022년 6월 인구동향”에서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의 자료에서도 지속 감소세로 나타나 출산율이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국가 인구감소와도 연결되고 있으며, 실제로 2020년을 기점으로 국내 인구는 감소세로 전환하여 50년 뒤에는 1,20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21).

인구감소는 경제활동 및 생산인구에 참여할 인구 감소와 직결되며 국가 경쟁력 저하까지 이어진다. 또한 장기적으로 청년 세대에게 노동 강도의 증가와 부양 비용 부담 등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크다. 즉, 국가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를 위한 관심과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것이다.

청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8월, ‘청년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기본법’을 기반으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 5년마다 청년정책의 큰 틀을 만드는 기반을 다졌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는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교육, 참여·권리 등 5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으며 2021년에는 23조 8,338억, 2022년에는 24조 6,493억 등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년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청년 정책 분석을 위하여 예산 관련 자료를 확인하였지만, 2019년 이전의 청년예산에 대한 자료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국무조정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하지만 일부 발표 자료를 통해서 청년 대상 예산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년정책(2018)의 자료를 통해 일자리 예산의 경우 2018년 약 3조, 2019년 약 4조 7천억 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년 일자리 예산이 2021년에는 8조 2천억, 2022년에는 7조 7천억인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년 정책 예산의 총액의 경우에도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년미래연석회의가 분석한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예산은 2020년 20조 8천억 원이었다(말산업비즈, 2019). 2021년 예산이 23조 8천억 원이므로 전년도에 비해 3조 이상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청년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청년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청년의 실질적인 의견 수렴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구가 있다. 바로 청년 정책 거버넌스이다. 거버넌스는 ‘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식'을 말한다(오승은, 2006). 더 나아가 정책 거버넌스는 정책행위자들 간 파트너십이라는 관점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투영하려는 접근방법(라미경, 2013)이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정책 과정에 언론, 시민사회단체, 시민과 같이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이명석, 2002; 주성수 2004; 오세제 2020).

앞선 내용을 정리하자면 청년 정책 거버넌스는 행정기구인 지자체와 정책 당사자인 청년이 정책 수립 및 결정 과정에 함께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의 개발과 평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청년 정책 거버넌스는 정책 수립과 평가 과정 등에 청년의 참여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정책에 대해 청년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각 지자체에서는 청년정책네트워크 등과 같은 청년 정책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용환(2021)은 청년의 참여를 보여주지않아 그친다고 지적하였으며, 김동욱(2020)은 청년정책에 낮은 신뢰도의 원인으로 '청년을 배제한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김동현(2022)은 정부의 청년에 대한 판단 근거가 현재가 아닌 과거에 머물러 있으며, 청년의 생각으로 관점이 달라져야 정책 수혜·대상자들의 니즈를 보다 분명히 파악한 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최용환(2021)은 청년 정책 거버넌스에 참여한 청년에 대해서도 정책 과정에 대한 기초 지식의 부족과 과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며 청년 정책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청년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청년 정책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연구도 필요하다. 2017년 첫 연구가 진행되어 총 2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활성화 방안 관

련된 학술 연구물의 숫자는 많지 않아 활성화 방안 관련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년 정책 거버넌스의 현황을 분석하고, 청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실질적인 정책 제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활성화 방안 탐색과 관련하여서는 청년 정책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사례를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청년 정책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청년 정책 거버넌스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방안을 제안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1) 청년 정책 거버넌스 현황

청년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오래 되지 않은 일이다. 2015년에 들어서 처음으로 청년과 관련된 정부 조직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에 들어서 청년기본법과 같은 법률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표 1> 청년 관련 정부조직 연혁 및 관련 내용

연도	소속	명칭	비고
2015년	고용노동부	청년여성 고용정책관	청년여성고용 정책관에서 청년고용정책관으로 전담·분리
2019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 정책관	
2019년	청와대	청년정책 추진단	-
2019년	서울시장	청년청 신설	-
2020년	국무총리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설치	청년기본법 제정,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청년정책조정 위원회로 변동

연도	소속	명칭	비고
2021년	서울시장 직속	미래청년 기획단	‘청년칭’에서 미래 청년 기획단으로 확대
2021년	청와대	청년비서관 설치	-
2022년	국무총리	2030자문단 설치	부처별 특성에 맞춰 운영
2022년	7개 부처	청년보좌역 운영	기재부, 행안부, 문체부, 고용노동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별정직 6급 대우 청년보좌역 배치

* 오수연, 김성엽, 박성민(2021), 김상봉, 김태영(2022), 연구 내 표 수정·보완

<표 1>과 같이 청년 관련 주요 조직은 고용노동부에서 처음으로 생겨났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기구를 처음 설치한 대표적인 곳은 서울시였다. 또한 2022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2030자문단이 설치되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7개 부처에서 청년보좌역을 운영하는 등 청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참여를 확대시키고 있다.

청년과 관련된 정부 조직 및 법률 제정과 더불어 나타난 것이 바로 청년 정책 거버넌스이다. 2015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17개 지자체에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2년 6월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230개의 시군구에서 청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는 청년 정책 거버넌스 설치 근거가 함께 마련되어 있으며 대다수의 시군구에서 청년 정책 거버넌스를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청년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7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정책 거버넌스의 현황을 확인하였는데,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규모와 청년 정책 거버넌스 명칭

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에서 나타나듯이 각 지자체별로 청년 정책 거버넌스의 운영 규모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타남을 볼 수 있었는데, 2022년을 기준으로 서울시의 경우 위원 수가 1,200명에 달하였으며, 가장 적은 곳은 충청북도 36명과 비교하여 30배가 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명칭에서는 대부분의 시도에서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네트워크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충청북도의 ‘청년광장’, 전남의 ‘청년의 목소리’, 제주의 ‘제주청년원탁회의’ 등과 같이 다른 명칭으로 청년 정책 거버넌스를 명명하는 곳도 있었다. 그리고 17개 시도 중 강원도만 유일하게 청년 정책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17개 시도별 청년 정책 거버넌스 규모 및 명칭 (2022년 기준)

지역	위원 수	청년정책거버넌스명
서울	1,200명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부산	189명	부산 청년정책네트워크
대구	62명	대구 청년정책네트워크
인천	532명	인천 청년네트워크
광주	50명	광주 청년위원회
대전	164명	대전 청년정책네트워크
울산	50명	울산 청년정책네트워크
세종	50명	세종 청년정책네트워크
경기	215명 / 동서남부 권역별로 50여명씩 배분	경기 청년참여기구
강원	-	-
충북	36명 / 북부권역 30명, 중부권역 3명, 남부권역 3명	충북 청년광장
충남	120명	충남 청년네트워크
전북	74명	전북 청년정책포럼단
전남	70명	전남 청년의 목소리

지역	위원 수	청년정책거버넌스명
경북	400명 / 2019년 기준	경북 청년정책참여단
경남	237명	경남 청년정책네트워크
제주	90명	제주청년원탁회의

* 출처: 김상봉, 김태영(2022)

17개 시도별 청년 정책 거버넌스의 현황 탐색 부분에서 분과 구성 및 예산 제안 형태를 탐색해 보았다.

<표 3> 17개 시도별 청년 정책 거버넌스 분과 및 예산 제안 형태(2022년 기준)

지역	분과구성	예산 제안 형태
서울	일자리/창업, 주거, 문화예술, 평등/인권, 사회안전망, 기후환경	청년자율예산 정책 제안 가능
부산	노동·일자리, 주거, 문화예술, 사회안전망, 기후·환경, 교육, 참여, 평등·인권	실, 국에서 예산 책정
대구	일자리, 복지·문화, 참여·권리, 교육, 주거	청년분과로 배정된 예산에 대해 청정넷이 함께 예산 논의
인천	취업, 창업, 문화예술, 주거생활안정, 참여권리	청년정책 관련 주민참여예산 참여
광주	경제·일자리, 교육·진로, 문화·삶의 질, 참여·소통	-
대전	주거, 마을공동체, 마음건강, 노동, 일자리, 기후환경	대전주민참여예산제 활용하여 제안
울산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
세종	기획·대학생·주거·문화·참여권리·일자리·창업	정책 제안 시 예산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안
경기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복지, 참여, 권리, 자율	주민참여예산제 활용하여 제안
강원	-	-
충북	일자리, 생활	-

지역	분과구성	예산 제안 형태
충남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
전북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지원, 참여·권리	-
전남	일자리·문화·복지·교육 (4기 기준)	정책 제안시 예산 제안 가능
경북	청년일자리, 주거교육, 문화·복지, 참여·권리	-
경남	마음건강, 금융, 농어업, 봉사, 주거, 교육, 일자리, 창업, 사회적경제 등 16개	정책 제안시 예산 제안 가능
제주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권리, 환경, 관광	-

* 출처: 김상봉, 김태영(2022)

<표 3>과 같이 17개 시도별 청년 정책 거버넌스의 분과 구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현 시대의 청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한 분과가 있었다는 점이다. 17개 시도 청년 정책 거버넌스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분과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부분 관련 분과였다. 이는 정부에서 발표한 청년정책 계획과도 같은 맥락을 띄고 있는데, ‘2021년 중앙부처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 일자리 정책에 115개 과제, 8조 2천여 억 원(34.5%)을, 주거 정책에 24개 과제, 8조 7천여 억 원(36.5%)을, 교육 정책에 88개 과제, 5조 7천여 억 원(23.8) 등 청년 정책 전체 예산의 95% 정도를 투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시도별 특징에 따른 분과 구성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전은 ‘마을공동체’ 분과, 경상남도도는 ‘농어업’ 분과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의 특성을 살려 ‘관광’ 분과를 포함하는 등 지역별 특징을 살린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산 제안 형태와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 대다수의 청년 정책 거버넌스에서 정책제안 과정에서 제안서 내에 예산을 함께 제안할 수 있는 형태를 띄

고 있었다. 대부분의 청년 정책 거버넌스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예산을 제안하고 있으나, 서울 시만 청년자율예산을 배정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정책 제안 과정에 예산서를 함께 제안 받는 점은 정책의 구체화 및 실현 가능성 제고함과 동시에 정책 입안과 과정에 청년이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성취감을 주어 지속적으로 청년이 정책에 대한 관심과 정책 제안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청년 정책 거버넌스를 통해 청년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유럽 연합은 청년과 관련된 기관, 단체의 협치로 청년 정책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 청년보장 프로그램 수립 권고안에 따라 청년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청년보장 정책에 공공·민간·시민사회가 함께하고 있으며, 파트너십 촉진을 위해 청년단체도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갖춰 운영하고 있다(김주일, 2016).

핀란드는 청년법에 근거하여 국가 차원의 청년정책 전반적인 업무를 교육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방정부, 청년 조직, 기타 단체, 청년 개인들과 적절히 협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신영규, 2021). 또한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 조직, 단체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청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 정책 당사자인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년 정책 거버넌스의 현황 분석을 통해 운영 규모, 명칭, 분과 구성, 예산 제안 형태, 해외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해 청년 정책 거버넌스가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청년의 의견 수렴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청년 정책 거버넌스와 관련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지선(2021)은 이미 완성된 청년정책에 대해 공청회 등에서 뒤늦게 의견을 듣는 정도라고 하였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는 부족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여론에서도 청년 관련 논의에 대해 ‘청년 없는 청년담론’이라는 지적을 계속 하고 있다(오수연, 김성엽, 박성민, 2021). 이러한 문제는 청년 정책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부정적으로 다가갈 청년 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참여 의지 약화로도 다가갈 수 있다. 또한 청년에 대한 관심이 커진 현 상황에서 청년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일부 청년만 참여하는 형태로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청년 정책 거버넌스의 형식적인 운영으로 연결될 가능성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청년의 의견 반영이 어려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 정책 거버넌스 개선 및 활성화 방안 탐색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를 진행하기 앞서 청년 정책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선행연구 탐색을 진행하였다. 선행연구 탐색을 위하여 청년 정책 거버넌스 관련 연구동향 및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로 청년 정책 거버넌스 관련 학술지 현황을 확인하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청년정책거버넌스 관련 학술 논문을 검색하기 위하여 논문명, 주제어로 청년거버넌스, 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정책 참여, 청년정책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였으며, 총 23편의 학술논문이 검색되었다. 관련 연구는 2017년에 처음 확인되었으며,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7편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후 2021년부터는 다시 감소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2022년 3편이 발표되어 연구가 감소하는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청년 정책 거버넌스 관련 학술 연구의 주제어 탐색을 진행하였다. 주제어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것은 <표 4>와 같이 청년정책(18회)이었으며, 다음으로 거버넌스(15회), 청년(10회), 청년기본법(5회)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청년 정책 거버넌스를 통한 역량과 관련된 키워드는 전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청년 정책 거버넌스 관련 연구 주제어 현황

순위	빈도	백분율(%)	주제어
1	18	12.6%	청년정책
2	15	10.5%	거버넌스
3	10	7.0%	청년
4	5	3.5%	청년기본법
5	4	2.8%	참여
6	3	2.1%	정책
6	3	2.1%	청년거버넌스
6	3	2.1%	청년기본조례

세 번째로 청년 정책 거버넌스 관련 학술 연구의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청년 정책 거버넌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2가지 맥락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로 청년 정책 거버넌스와 관련하여서는 청년 정책 거버넌스의 특성, 지원 방안, 활성화 방안, 현황과 과제 분석 등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청년 정책과 관련하여 다뤘는데,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의 태도와 영향요인, 청년정책 개선 방향, 청년정책에 대한 지방자치의 태도, 청년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정책 거버넌스와 관련한 내용보다는 청년 정책의 영향, 효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어 주제어 분석에서 청년정책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과 비슷한 맥락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유사한 선행 연구로 광민재 외(2018), 이탁연(2019)의 연구가 있었다. 광민재 외(2018)는 광주광역시 청년 정책 거버넌스를 사례로 네트워크 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네트워크

구조를 밀도와 중심성(연결정도 중심성, 인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으로 분석하여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탁연(2019)은 기초자치단체인 중랑청년네트워크의 위원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현황 및 결과 파악, 문제점을 도출하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두 선행 연구 모두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으나 광민재 외(2018)의 연구에서는 밀도와 중심성 등 내외부적인 네트워크의 연결점에 중심을 두었다는 점, 이탁연(2019)의 연구는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활성화 방안과 큰 맥락을 같이 하지만 연구대상이 기초자치단체라는 점과 참여하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활성화 방안 탐색에 대하여 좀 더 폭 넓게 다루고, 연구대상면에서도 청년 정책 거버넌스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성을 띄고 있는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청년 정책 거버넌스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청년 정책 거버넌스의 현황 분석을 토대로 나타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으로 전국에서 청년 정책 거버넌스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운영함과 더불어 가장 큰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13년 1기를 시작으로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운영되었으며 청년을 청년문제 해결의 객체에서 주체로 이끌어내었다. 또한 매년 많은 청년이 유입되고 있는 서울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하여 앞서 현황 분석에서 확인하였듯이 1,200명의 청년 위원을 선발하여 청년이 일자리, 주

거, 사회안전, 기후환경 등의 정책 제안에 참여할 수 있게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정책 거버넌스의 대표격인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의 청년 위원 및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년 정책 거버넌스 개선점 및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청년 정책 거버넌스에 실제 참여 경험이 있는 청년,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내용 분석을 위하여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 참여 청년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선별에서는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참여한 기간에 따른 시각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활동 1년 미만, 1년 이상인 위원을 배분하여 선정하였다. 더불어 참여 청년 뿐만 아니라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공무원의 의견도 듣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FGI 및 서면인터뷰는 2022년 9월에 진행되었으며, FGI는 약 3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FGI는 초기 라포형성을 시작으로 점차 본 질문으로 다가가는 형식을 취했으며, 연구자는 주요 질문을 제시하고 연구참여자 간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진행되게 하였다. 질문내용은 청정넷을 알게 된 계기, 활동에 대한 평가, 교육 및 운영에 대한 의견,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의 특징은 <표 4>와 같다.

<표 5> 연구참여자의 특성

방법	구분	역할	성별	경력기간
FGI	참여자1	위원	남	1년
	참여자2	위원	여	1년
	참여자3	위원	여	2년
	참여자4	위원	여	3년
	참여자5	위원	남	3년
	참여자6	위원	여	3년
서면 인터뷰	참여자7	위원	여	3년
	참여자8	위원	남	1년
	참여자9	담당공무원	남	1년 6개월

III. 연구결과

1. 점차 나아지고 있는, 하지만 나타나는 운영의 아쉬움

연구참여자의 참여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청년의 일상을 고려하지 않은 운영진 주도의 일정 운영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한지 1, 2년차 경력의 연구참여자는 모집부터 정책을 만드는 과정, 담당 공무원 간의 미팅 과정에서 시간이 매우 부족하였다고 하였으며, 늦은 피드백으로 정책 제안 과정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감을 표시하였다.

정책 제안자 입장에서 일정이 타이트했다. 속도가 빨랐다.(연구참여자 2)

공무원 분들이 일정을 급하게 잡음,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연구참여자 1)

모집기간이 연기되면서 일정들도 뻑뻑했다.(연구참여자 3)

청년이 열심히 참여하는데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말씀해주시면 좋을건데, 1주일 전까지 답변이 안왔다.(연구참여자 5)

공무원분들의 스케줄을 맞춰야 하는게 아쉬웠다.(연구참여자 2)

반면 3년차 이상 경력의 연구참여자는 이전에는 공무원의 업무시간을 맞추는 일정 운영에서 평일 근무시간에 참여하기 어려운 청년을 배려하여 퇴근 시간 이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형태로 바뀌었다고 하며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하였다. 하지만 2022년에

는 운영을 도와주는 업체의 일정을 맞춰야 하는 점이 있어 운영에서의 아쉬움이 있음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일정 운영 측면에서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내부적으로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몇 년간 활동을 해온 입장에서 이전보단 나아졌다. 공지가 더 빨리 되는 것 같다. 이전에는 몇 일이 아니라 몇 시간 전에 공지를 했다.(연구참여자 4)

퍼실리테이터가 들어와 운영진의 부담을 줄여주긴 하였지만, 업체의 일정을 맞춰야하다 보니 운영에서 제한점이 있었다. 기술적인 면에서의 도움은 있었으나 운영에서의 불편함도 있었다.(연구참여자 4)

더불어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위원 관리 측면이었다.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는 2022년 선발 목표 인원이 500명에 비해 1,000여명이 넘는 청년이 지원하여 청년 정책 제안과 관련한 청년의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확대된 규모와 더불어 많은 청년이 참여함에 따라 위원 관리 부분에서는 더욱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관련되어 체계적인 위원 관리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났다.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많아졌다보니 되게 다양한 이슈가 있었다.(연구참여자 3)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의지는 느껴졌다. 하지만 인원이 많아진 만큼 체계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운영이 아쉬웠다.(연구참여자 5)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참여 인원 중 신규 인원이 90%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신규참여자

가 많은 만큼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가치와 의미를 파악하기보다 정치적으로, 경력적으로 바라보고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 운영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연구참여자 7)

청정넷에서 약속문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서 고민이 되었으며, 인원이 많은 만큼 허수가 많았던 것 같다. 청정넷 몇 명이 신청을 했다가 홍보하기 보다는 마지막까지 남는게 중요한 것 같다(연구참여자 6)

위원 관리 문제는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는 2019년 4회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서로를 위한 존중의 약속, 평등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위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약속문’을 만들어 위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내부적인 문제가 지속 발생됨에 따라 2022년 8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행동수칙(안)’을 제정하였으며, 2022년 10월 열린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최종안을 발표하여 위원 관리 측면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서울청정넷의 문화와 가치가 담긴 약속문이 존재하지만 지켜지지 않거나 문제상황 발생 시의 대안이 미흡하여 운영매뉴얼 #를 통해 10차례 가까이 회의를 진행 및 논의하였고, 참여자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약속문과 매뉴얼, 수칙이 꾸준히 논의되어야 한다.(연구참여자 7)

이와 더불어 예년에 비해 많아진 인원 관리와 원활한 공지, 분과별 관리를 위하여 2022년부터는 카카오휴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정책 제안 팀별 활동, 분과별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카카오휴를 활용함에 따라 채널이 많아져 내부적으로 혼선이 발생하

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지는 카카오휘크, 회의는 카톡을 쓰다 보니 정신이 없었다. 채널이 통일되었으면 좋겠다. (연구참여자 5)

또한 공지 및 관리를 위한 측면으로 카카오휘크를 활용함과 동시에 내부적인 소통은 불가능하게 함에 따라 내부적인 소통 부분에서는 역효과를 불러오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2. 실질적이고 눈높이에 맞는 교육에 대한 요구

정책에 대한 이해와 원활한 정책 제안이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활동 경력이 짧은 연구참여자의 경우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내용을 배움에 따라 불만이 없었으나, 경력이 올라감에 따라 교육에 대한 아쉬움, 활성화에 대한 의견이 나타났다.

교육이 도움이 되었는데, 스타트업이랑 중소기업 차이를 잘 설명해줬고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어서 좋았다. (연구참여자 2)

1년차여서 괜찮았다. 모르니까. (연구참여자 1)

올해 교육을 강화했으나 교육을 위한 교육이 되었던 것 같으며, 정책 제안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한데 어떤 발제자 분께서는 교육 내용이 청정넷하고 관련이 없을뿐더러 방향이 잘못됐다고 하는 식이어서 별로였다. 이러한 교육이 정책 제안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연구참여자 4)

전문가 강의 중에 일부는 반대되는게 있고, 청

년의 참여가 한계가 있다는 뉘앙스가 있어서 청정넷에 대해 다 알고 있는 전문가가 강의하는게 맞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연구참여자 5)

교육 내용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은 교육 콘텐츠를 진행하는 강사의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에 대한 낮은 이해도였다. 교육 내용면에서 참여하는 위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어야 하는데,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은 교육이 진행되어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교육에 대한 아쉬움과 미흡한 점은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담당자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적인 고민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는 모집 이후 초기에 기초 교육, 정책제안서 작성 교육 등이 이루어지지만 막상 정책 제안 활동을 시작하면서 행정과의 소통, 정책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집 이후 초반에는 청정넷에 대한 기본 이해와 구조 등을 익히고 정책 제안 활동을 하면서 수시로 작성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청년들의 경우 행정의 운영 체제 등을 이해하지 못해 불만이 있거나 부서의 방식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종종 목격하는데 행정의 체제, 구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관리자들이 계속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참여자 9)

이러한 교육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큰 부분을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주동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주로 연차가 있는 위원이 관련 스터디 또는 교육자료를

만들어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제안 관련해서 줌터디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교육을 개별적으로 진행했었다. 같이 해야 하는 교육을 개별적으로 하는게 맞을까하는 생각이 들긴 하였지만, 분과 내의 정책 제안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여 진행하였고, 정책 제안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연구참여자 4)

이에 대해 활동 경력이 짧은 연구참여자도 경력이 많은 위원과의 교류 및 관련 교육을 통해 진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행정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부분에서 연차가 있으신 분들이 매뉴얼 만들어주면 금방 만들 것 같다.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을 알아야 하다 보니 긍정적으로 봤다.(연구참여자 2)

분과 안에서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시각에 맞춰 교육해주면 좋을 것 같다. (연구참여자 6)

3.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의 필요성

2020년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는 일상을 바꾸어놓았다. 교육 현장에서는 대면 중심의 교육 방법에서 비대면으로의 전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인 지금에 이르러서는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한 교육 형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도 마찬가지이다. 코로나19 이후 약 2년 간은 비대면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운영 방법으로는 줌을 활용한 회의가 활성화되었다. 이종현 외(2022)은 대면 회의와 비대면 회의 간의 회의유형별로 회의 만족과 회의효과성, 직무탈진 차이를 검증하였는데,

대면 회의집단보다 비대면 회의집단의 회의효과성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하지만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와 같이 자발적이고 정책 제안을 위한 모임에서는 앞선 연구결과와는 반대로 비대면 회의 상에서 소극적인 참여가 늘어났으며, 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온라인 분과 회의를 하다보면 위축을 받기 위해 출석은 하지만 비디오와 오디오를 꺼놓는 경우가 많다. 즉, 비대면이 소극적 참여를 확대하는 느낌이 강하다.(연구참여자 6)

2021년에는 온라인으로만 운영하였으며, 최대한 참여하려고 했는데 대면으로 만났을 때 더욱더 참여를 꾸준히 해준다. 비대면으로 하면 서로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연락하기도 어렵다.(연구참여자 3)

2022년부터는 워드 코로나 정책으로 대면 활동이 확대되었으며, 그로 인해 정책제안부터 실국과의 협의 과정이 원활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하지만 비대면의 일상화와 각기 다른 일상을 살고 있는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면과 비대면 활동이 혼합된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장단점이 확실하다. 비대면의 장점은 서울 거주 청년이 모임 수 있는 시간이 제약이 있는데 참여 기회를 보장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운영의 미를 살려서 대면, 비대면을 번갈아서 같이 하면 좋겠다.(연구참여자 6)

작년까지는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대부분의 참여자가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대면으로 진행되어 네트워크나, 소모임, 정책 제안에 있어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다

만 한 분과당 100~150명의 참여자가 있다 보니 분과회의 등은 대면으로 진행하지 못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면으로 진행할 경우, 정책제안 부터 구체화 작업, 실국부서 협의의 과정이 보다 잘 나타나 참여자들의 효능감이 높았습니다.(연구참여자 7)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과 더불어 청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청년의 특성에 맞는 방식도 필요하다. 이은형(2021)은 현 시대의 청년인 MZ세대에 대해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디지털로 무장한 세대이며, 개인화, 즉, 미퍼스트(Me first)가 강하여 우리의 개념이 약하고 개인화된 공정성 개념을 갖고 있으며,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나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불공정에 대해 많이 민감하게 느끼고 분노한다고 하였다. 또한 일의 필요성을 공감할 때 흥미를 가지고,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MZ세대의 특징에 따라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청년도 참여에 대한 이유와 필요성을 느끼면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동에 관심과 참여 동기 또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청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 수립에 본인의 역할과 노력이 반영되길 희망하였지만, 정책 제안 과정에서 현실의 벽을 느끼면서 이전에 가졌던 관심과 참여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이 주도적이지만 서울시는 뒤에 있고, 청년에게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 뭘 원하는지 더 애매하게 느껴진다.(연구참여자 5)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청정넷이라는 판을 깔아 놓은 것에 대해선 공감한다. 주도적인 건 청년들에게 맡긴다고 하지만, 결과는 시청에서 정하는 것 같았다.(연구참여자 2)

실국 협의까지 가야 불수용 정책의 원인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참여만 원하고 아이디어만 빼먹는 느낌이다. 예산은 줄이지만 획기적인 것만 들고 오라는 것 같다.(연구참여자 3)

또한 MZ세대 청년은 보상에 대하여도 민감하다. 현 시대의 청년은 이전 세대에 비해 개인화 성향이 강하며, 단기적인 보상을 중요시하게 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으면 주저 없이 퇴사를 결정하는 세대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업무 외의 활동에서도 적절한 보상을 희망한다. 보상 방법으로는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업무와 무관한 활동에서는 비금전적 보상으로도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봉사활동 시간, 인증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과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였다. 더 나은 서울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하여 모였지만, 다양한 상황에 있는 청년이 참여함에 따라 보상에 대한 시각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보상이 약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도 적절한 보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다른 것 같다. 대학생이 많냐 직장인이 많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 같다. 봉사시간이나 활동비에 대한 요청이 많았는데, 참여자로서 그런 부분 보다는 거버넌스에 목적성을 두면 좋지 않을까 한다.(연구참여자 6)

대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대학생 참여와 비율도 높았다. 봉사활동시간이 필요한 대학생에게 활동 실적증명서 작년도 발급 안해 줬다. 그래도 올해부터는 발급해주고 있다. 다른 데에 비해

시간 대비 받을 수 있는 게 매우 부족하다.(연구참여자 4)

자발적 참여인 만큼 선발되신 모든 분들이 활발한 참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으로 활발하게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소량을 선물이나 성과급을 지급하여 보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연구참여자 8)

우수한 정책에 대한 성과 보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디어에 대한 저작권도 있으며, 증명할 거리가 없다보니 남이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다른 곳에서 상금을 타는 경우도 발생한다.(연구참여자 4)

참여에 대한 보상이 없다. 열정만 강요하는 시스템이다. 뭔가 얻고 싶어 온 사람도 있지만 참여했다는 자긍심을 복돋게 해줘야 하는데 부족한 것 같다.(연구참여자 5)

누군가는 활동증명서가 정말 필요할 것이다. 정책을 만들고 참여하는데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보니 줌에서 닉네임만 보인다.(연구참여자 1)

보상에 대해서도 찬반은 분명했다.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목적 위주냐, 활동에 대한 보상 위주냐의 차이였다. 또한 청년의 상황에 따라 보상의 필요성의 차이가 나타남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금전적 보상이 아닌 비금전적 보상이어도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들이 많이 참여했다가 중간에 사라지기도 하는데, 대부분이 정책제안 과정에서 큰 거 같

다. 프로젝트, 소모임도 있었지만 정책제안 말고 다른 활동 비중도 높아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안하는 과정에서 같이 하는 것도 좋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좋았고, 프로젝트 하는 것도 좋았고, 교류하는 것도 좋았는데 정책제안에만 집중되는 거 같다. 이게 거버넌스의 다가 아닌데, 청년이 정책 제안에 주를 두고 있는 것 같다. 다른 과정을 만들어주면 좋겠다.(연구참여자 6)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이 다양한데, 정책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쉽다. 다양한 방법이 묻히고 하나만 빛을 보는 느낌이다. 정책 제안이 끝나면 끝나는 느낌이 든다. 너의 참여가 이런 의미가 있었다와 연결되면 좋을 것 같다.(연구참여자 5)

정책제안만 하기 위해 모인건 아닌거 같은데(연구참여자 5)

청년 정책 거버넌스의 주 목표는 정책 당사자인 청년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으며, 적절한 친밀도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박민재 외(2018)의 연구에서도 청년위원들의 활동 기간이 6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네트워크의 유기성이 부족하였으며, 내부 교류의 증진을 위한 분과별 모임뿐만 아니라 친목도모의 장을 만들어 구성원들이 분과를 넘어 화합하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위원의 관심과 참여 의지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실질적인 정책 제안 과정을 위한 지원의 확대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정책을 만들고 운영하는 서울시와 정책의 당사자인 청년이 함께 운영해 나가는 정책 거버넌스이다. 예산, 행정적, 정책 입안 과정에 대한 지원은 서울시가 맡고 있으며 정책 제안 및 입안을 위한 자료 조사 및 설계 과정은 청년이 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협치 과정을 통해 서울시 청년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위하여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을 몇 가지 제안하였다.

정책 제안 할 때 실국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분이 함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내부 공무원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 시작부터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처음부터 제안할 때부터 같이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정책제안에 끝까지 참여했는데, 실국과 협의하는 과정이 너무 한 두 번 밖에 없어서 아쉬웠다. 시의원들과 미리 접촉할 수 있는, 제안을 만들어 줄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더 많으면 좋겠다. (연구참여자 3)

정책 만드는 건 했는데, 실국 협의가 너무 한 정적이었다. 퀘스트를 또 하는 느낌이었다. (연구참여자 1)

올해 자문회의 정말 많이 잡아주었으며, 주말, 야간에 하는 것도 해줘서 많이 나아졌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로 정책은 70~100% 수준으로 제안하여야 검토하고 있더라. 일정 궤도까지 안 올라가면 봐주질 않고 후순위로 밀린다. 적극적인 부서는 오히려 적극적이었다. 부서의 의지가 중요하다. (연구참여자 4)

실국협의 갔을 때 적극적이었고, 부서마다 차이가 큰 거 같다. 피드백을 받고 갔는데 현장에서 안된다고 하니까 더 힘들었다. 비슷한 것을 4개를 분석해서 같다. 정책의 빈틈을 찾아서 갔다. 어느 정도 단계까지 하려면 교육에서 실질적으로 되어야 한다. 심화교육에서 자체 역량도 키우고 공무원도 적극적인 분이 했으면 좋겠다. (연구참여자 5)

미래청년기획단 내 사업은 잘 소통되지만, 다른 실국이 가면 다른 세계인거 같다. (연구참여자 4)

첫 번째로는 정책 입안 과정에서의 담당 실국 공무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대한 바람이었다. 정책 제안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제안하고 검토를 요청한 정책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의 낮은 의지와 인제 받을지 모르는 피드백으로 인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정책 제안 과정에서 꽤 높은 수준의 정책안이 나와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 제안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 제안과 관련하여 줌터디에서 다 해줬다. 운영지기한테 부담이 너무 갔다. 기존 운영진을 줄이려고 했다가 다시 기존 운영진이 필요하다고 시에서 말하였다. 청정넷 규모 축소와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다가 문제였다. 운영진을 대폭 늘렸다. (연구참여자 4)

시스템적으로 공지를 하는 건 다 할 수 있는데, 운영진에게 다 맡기다보니 피로도가 높아졌다. 1년차인 분들은 그것대로 불만이 쌓였다. 서울시가 훨씬 더 친절해져야 할 것 같고, 시 차원에서 듣고 개선해야 할 거 같다. (연구참여자 5)

열정페이, 전문가 비용을 도움지기한테 주어야 할 것 같다. 정책제안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도움지기가 되는 것도 문제이다. 전문가 팀이 붙어줘야 한다.(연구참여자 4)

두 번째는 운영 인력에 대한 충원이다.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미래청년기획단 산하 청년참여팀에서 총괄하여 운영하고 있다. 청년참여팀에는 팀장을 비롯하여 6명의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천여 명에 달하는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을 관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위원 관리 및 운영의 원활함을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운영 보조 업체와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진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각 분과별 운영지기, 도움지기가 많은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 2022년에는 각 분과별 3명씩 운영지기가 18명, 도움지기가 21명이 위촉되어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에 서포터를 하였다. 하지만 교육 및 운영 부분에서 적은 인원이 많은 것을 관여하여야 함에 따라 부담이 크게 나타났다. 특히 정책 제안 과정과 관련하여 교육, 정책 제안과 관련한 전문적 피드백 제공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며 전문가 집단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 거버넌스는 관과 민의 협치로 운영되어야 하는 기구이다.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국내의 대다수의 청년 정책 거버넌스에서는 각 지자체와 청년 위주로 청년 정책 거버넌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가의 경우 교육 진행 부분에서 일부 참여하는 정도이다. 해외의 경우에는 청년 정책 거버넌스 운영과 관련하여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청년 조직, 민간 청년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청년 정책 거버넌스 운영 부분에서 청년전문가 또는 단체, 집단 등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청정넷, ‘거버넌스’에 대한 더 많은 연구

들과 체제 분석을 통해 다양한 평가들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평가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통해 더 나은 청정넷과 청년 거버넌스 운영 방침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연구참여자 9)

세 번째는 청년 정책 거버넌스와 관련된 연구에 대한 지원이다. 선행연구 탐색에서 확인하였듯이 청년 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개척 분야이다. 인구감소로 인해 부양비용의 증가, 노동 인력의 감소 등과 같은 미래 성장 동력의 약화는 미래의 청년층에게 많은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그 과정의 일환인 청년 정책 거버넌스는 필수적인 기구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청년 정책 거버넌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질 좋은 청년 정책 제안이 이루어질 수 없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청소년 참여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역량 강화, 효과성 등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참고사항이 되고 있다. 청년정책기본계획은 2021년 처음 수립되었으며, 향후 5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수립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년 정책 거버넌스를 통한 청년의 역량 강화, 효과성 등에 대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 정책 거버넌스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IV. 결론 및 제언

앞선 연구 결과를 통해 청년 정책 거버넌스의 현황을 확인하였으며, 사례로 진행한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FGI 및 서면인터뷰 내용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에 대해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운영의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 비해 정책 제안 과정의 프로세스가 나아지긴 하였으나, 여전히 행정기구인 시청 위주로 움직여지고 있었으며, 원활한 피드백을 받는게 어렵다고 하였다. 위원 관리 부분에서도 1,000여명이 넘는 대규모의 인원임에 따라 다양한 이슈 발생, 많은 소통 창구로 소통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둘째, 실질적이고 눈높이에 맞는 교육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났다. 경력이 올라감에 따라 교육에 대한 아쉬움과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교육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해도 높은 강사 섭외, 위원 간의 교육 활성화 지원 등을 필요로 하였다.

셋째,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의 필요성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늘어난 비대면 회의로 인해 소극적인 참여자가 늘어났으며, 대면 활동만큼의 효과가 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이를 위해 대면과 비대면의 장점을 살린 활동 방안 탐색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또한 지속적인 참여를 위하여 금전적, 비금전적인 적절한 보상에 대한 논의도 나타났다. 더불어 정책 참여 활동도 중요하지만 구성원 간의 친밀도 향상을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의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넷째,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위하여 지원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 입안 과정에서의 공무원의 적극적인 움직임, 운영 인력에 대한 충원, 민간 전문가의 참여 확대, 관련 연구에 대한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른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정책 거버넌스의 구성원인 지자체와 청년 간의 협치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 또는 집단의 참여의 필요성이다. 이탁연(2019)은 중랑구와 청년 사이에 청년들의 언어를 공공부문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 언어로 바꾸는데 지원을 해주는 청년활동가가 함께하여 매개체, 완충장치 역할을 하였다고 하며 전문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지방자치단체와 청년 사이에서 나타나는 원활하지 않은 소통, 청년이 제안한 정책에 대한 소극적인 피드백, 정책 개발 과정에 대한 낮은 이해도로 인한 정책 고도화의 어려움,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교육 콘텐츠에 대한 불만 등과도 연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움 받을 수 있는 전문가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그리고 민간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정책 제안 및 고도화, 교육의 효과성 제고와 지자체와 청년의 부담감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정책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지자체와 정책 당사자인 청년 간의 협치 강화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 또는 단체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은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차후 청년 정책 거버넌스가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청년 정책 거버넌스의 활동 과정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의 탐색이다. 청년 정책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청년은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고,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사명감으로 참여하는 청년이 대다수이다. 이러한 활동으로 큰 의의를 느끼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으면 참여의지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개인화가 심화되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즉각적인 보상을 선호하는 MZ세대 청년은 본인이 한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의무감으로 참여를 지속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탁연(2019)은 임원을 맡은 의원들의 업무 부담과 노동 대비 턱없이 부족한 보상을 지적하였듯이 적절한 보상은 필요한 것이다. 광민재 외(2018)도 청년위원회 활동에 자부심을 느끼고 지속할 수 있도록 활동에 문화 복지 카드와 같은 보상을 제시하였다.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도 청년을 대상으로 회의, 기타 활동 등에 참여할 경우 봉사시간 제공, 일정 요건 충족 시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어도 정책 제안 과정에 참여한 것에 대한 인정과 역할에 대한 자각, 지

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적절한 보상책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청년 정책 거버넌스 내외부적으로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광민재 외(2018)는 청년 정책 네트워크의 문제점으로 관계망이 분절적으로 나타나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위원 간의 연결성이 약하다는 것이다.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이 분과, 정책 제안팀, 개인 등의 형태로 나뉘어서 활동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보편화되고 대면 활동이 약해짐에 따라 이러한 활동 간에서의 관계망이 약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원화되어가고 있는 현 시대에는 정보를 빠르게 검색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도 주요한 역량이지만, 사람과의 만남을 통한 경험의 공유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청년 정책 거버넌스 내외부적인 교류를 통해 상승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청년 정책 거버넌스의 인지도 제고, 더 나아가 질 좋은 정책 제안을 위하여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필요하다.

넷째, 청년 정책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효과성, 활성화 방안 등을 탐색할 수 있는 연구 지원이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연구동향 분석에서도 확인하였듯이 2017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청년 정책 거버넌스 관련하여 발표된 연구는 23편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청년 정책 거버넌스 관련 연구는 아직 생소하며 많이 활성화 되어야 할 분야로 볼 수 있다. 청년에 대한 관심이 커진 시기가 오래 되지 않았으며, 청년 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도 있다. 김현수(2019)는 청년 정책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들이 정책의 ‘수립-실행-평가’에 이르는 3단계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며, 원활한 거버넌스 체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의 필요성은 나타난다. 또한 청년 정책 거버넌스를 통한 청년의 역량 강화, 효과성, 활성화 방안,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에 대한 지원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분석한 첫 연구이며, 국내의 청년 정책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서울 청년 정책네트워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국내의 청년 정책 거버넌스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해외 사례 탐색을 통해 국내와의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내 청년 정책 거버넌스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주요 주제어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계점으로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소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청년 정책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다수의 청년을 대상으로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는 양적 연구가 진행되어 더 많은 부분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청년 정책 제안 부문에 있어 실효성이 더욱 제공되기를 희망한다.

참고 문헌

- 광민재, 신우진(2018), 청년정책 거버넌스의 네트워크 구조 분석: 사회연결망분석을 중심으로, 도시정책연구, 9(1), 27-48
- 국무조정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기획재정부(2021),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인구경제과.
- 김동욱(2020), 지방 청년 정책을 통한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대구형 청년보장제에 대한 정책 기대감과 정책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2020년 국제학술대회 자료, 184-210
- 김동현(2022), ‘청년주간을 맞아 생각해 본 ‘청년정

- 책'이 가야할 길, <https://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90616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년 9월 22일자
- 김상봉, 김태영(2022), 청년 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연구: 효과적인 청년 정책 제안을 위해, 서울연구원 2022년 작은연구 지원사업 연구과제 보고서
- 김주일(2016), 해외 선진국가의 청년 일자리 정책과 지방정부의 역할, 세계와 도시, 15, 서울시, 서울연구원
- 김현수(2019), 청년들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희망이슈, 45
- 라미경(2013), 보훈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거버넌스 구축, 정책과학연구, 23(1), 23-41
- 말산업비즈(2019), 정부, 청년 정책에 예산 20조 7,917억 원 집행, <http://www.horse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36>, 2019년 8월 28일자
- 매일경제(2021), [독자칼럼] 정책개발에 청년 참여, 내실 다져야,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1/10/1010603/>, 2021년 10월 26일자.
- 사례뉴스(2021), MZ세대 직장인 10명 중 3명, 입사 1년 만에 퇴사...퇴사율 막기 위해선 '이것' 필요하다, <http://www.cas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18>, 2021년 11월 10일자
- 신영규(2021), 핀란드 청년정책 동향, 국제사회보장리뷰, 18, 79-90
- 오수연, 김성엽, 박성민(2021), 청년정책 거버넌스 체계 현안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현대사회와행정, 31(4), 141-178
- 오세제(2020), 경기도 청년정책 거버넌스 연구: 광역 지방정부 실태 비교를 통해, 현대정치연구, 13(2), 77-116
- 오승은(2006), 거버넌스론에 관한 제 접근, 연세행정논총, 29, 47-75
- 이규홍, 정성은(2022). MZ세대들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호텔 공간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7(1), 239-252
- 이명석(2002), 거버넌스의 개념화: 사회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회보, 36(4), 321-339
- 이종현, 황재상(2022), 스마트워크 시대 직장인들의 회의에 대한 탐색적 연구: 회의유형 잠재프로파일 분석과 대면·비대면 회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35(3), 489-512
- 이탁연(2019), 기초자치단체의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네트워크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연구보고서, 65-86
- 청년정책(2018), 2019년 일자리 예산안 청년들이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봤음!, <https://www.jobaba.net/thema/exprcDtl.do?seq=782&cntntsSeCd=01&recom=Y>, 2018년 11월 7일자
- 주성수(2004), 공공정책과 거버넌스,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 통계청(2022).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 투고일자: 2022. 11. 14.
심사일자: 2022. 11. 27.
게재확정일자: 2022. 12. 23.

A Study on ways to activate youth policy governance: Focusing on the case of Seoul Youth Policy Network

Sangbong Kim, KeangTae Na

Department of Youth Science, Kyongg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ays to activate youth policy governance. Through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status of youth policy governance and analysis of research trends, problems and revitalization measures suggested in previous studies were identified. In addition, FGI and written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members and managers of the Seoul Youth Policy Network to explore ways to vitalize youth policy governance.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although it is improving, there is still a lack of operation. Second, education at eye level was necessary. Third, it was necessary to induce participation so that young people can be continuously interested. Fourth, it was necessary to expand support. The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participation of private experts is necessary to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youth and to enhance professionalism. Second, an appropriate compensation plan for participants is needed. Third, measures to promote internal and external exchanges are needed. Fourth, research support related to youth policy governance is need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vitalize youth policy governance in the future, and suggest that proper support and related follow-up research should be continuously conducted for the development of youth policy governance.

Keywords: youth policy governance, youth governance, youth policy, youth policy network